

민주, 여론 업고 '증세 드라이브' 가속

리얼미터 설문 85.6% 찬성...우원식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국민의당·바른정당도 공감대...내달 워크숍서 입법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증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나섰다.

증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거부감이 커왔던 만큼 여론전을 통해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슈퍼리치 과세'라는 접과 '국민적 합의'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85.6%가 초고소득 증세에 찬성했다는 전날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초유량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고 지역과 이념의 구분도 없이 압도적"이라면서 "새로운 나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박광운 의원도 이날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 "조세·법인세 정상화"라면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올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산하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평과세와 적정부담·적정복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도 증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논의 속도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증세 방향에서는 3당간 공조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한국당만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시 원내 전략과 대응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간 협의를 더 밀도 있게 진행키로 했다.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간 정책 조율을 더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다음달 8일에 원내대표단은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내부 집중회의를 하

기로 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음달 25~26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도 증세와 세제개편 입법 전략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구체적인 인상안을 언론에 흘리며 국민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연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자본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9%) 결과, 85.6%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존재감 키우기'

증세 TF 구성·탈원전 공세 강화

"국민의당은 아직 죽지 않았다." 국민의당이 25일 탈원전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증세 TF를 꾸리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제보 조작 파문에서 벗어나 '합치와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다단계제에서의 캐스팅보터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는 행보다.

우선 국민의당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증세를 살펴볼 TF를 만들기로 했다. "증세는 최후 수단", '국민적 동의 수반'이란 원칙 아래 만들어질 증세 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붙은 증세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이어 증세에 더해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라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을 향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조나 (사공사 등) 관계자들이 법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100% 패소하고 심지어는 형벌상 배임죄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TF를 가동 중인 국민의당은

오는 31일 신고리 5·6 호기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국민의당의 공세 강화는 증세와 탈원전 등 현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서 입지를 부각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40일 남게 여야가 대치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강한 전략을 펴며 몸값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경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만든 '여야3당 공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향후 현안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협조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에도 나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보 조작 사건 이후 일부에서 '탈당 러시' 운운하며 악의적 사실 왜곡으로 국민의당을 궁지로 몰았으나, 실제로는 당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7월 24일 현재, 국민의당 당원 수는 22만2000여 명으로 대선 직전보다 무려 2만 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조작사건 논란이 불거진 6월 말 당시보다도 오히려 5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정원 댓글 사건 MB도 조사해야"

민주 "원세훈서 끝날 일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원세훈 전 국정장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와 '녹취록' 등 추가 증거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 원장의 녹음파일로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 유죄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훼손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녹취록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선전기관으로 전략적 국정원의 총괄적인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원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지시한 원전의 책임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위원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전 원장 간 어떤 밀약과 지시, 방첩이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 원전 원장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날 재판에서 공개돼 증거로 채택된 국정원 부사장 회의 녹취록에는 "언론이 잘 못할 때마다 쥐어짜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지경기자 jkpark@



MB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증세 반대' 총력전

정우택 "약속 위반...홍준표 '국민 호도'"

자유한국당은 25일 여권이 추진하는 증세를 저지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여권의 증세정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 공세를 퍼부으며 여권의 여론전에 맞불을 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방향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며 "결국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렴주구식,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증세가 필요하다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회의 직후 "여야정협의

체는 국정원의 중요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증세를 위한 협의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철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세금은 파를 찌는 것과 같은데 이런 고통을 알면서도 착한 증세, 명예과세, 사랑 과세라고 말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라고 가세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PBC 라디오에 출연, "명예과세나 명예증세 등을 끌어다 앞에 붙여서 국민을 호도하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걷을 염치가 없으니 이런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헌특위, 설문 문항 놓고 기사음

헌법전문 수정 관련 '촛불집회' 언급에 野 일제히 반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5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전문 수정 등을 둘러싸고 기사음을 이어갔다.

제1소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그간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정전문위원들이 가안으로 만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전문위원이 헌법전문 수정과 관련한 설문 문항에 '촛불집회'를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왜 촛불 집회를 문항에 넣어놨느냐. 아직 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고 결과도 안 나온 사안"이라며 수정전문위원에게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몇달 전 일어난 일을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적 사명을 가진 개헌소위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준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개헌특위가 편향적

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문항에) 균형을 가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부마항쟁이든, 6·10항쟁이든, 촛불집회든 우리 회의에서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며 이 이야기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분권국가 지향'도 전문에 넣는 안 등 앞으로 더 정리를 하자"며 격양된 분위기를 수습했다.

1소위 여야 위원들은 이어 헌법 개정안에 성평등·사상의 자유·명령권 등을 넣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정자를 보냈다.

성일종 의원은 "성평등 보장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고 한 반면 이인영 의원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자를 여성으로 하자는 데는 다 동의했으며, 이를 더 강화하자는 데에서 공감했다"고 밝혔다"며 온도차를 나타냈다.

개헌특위 1소위는 대국민 온라인 설문 문항 총 32개 가운데 이날 16개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다음 달 1일 열리는 회의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텔급 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7억 (융자 8억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